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

- 강민지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원
(mj kang@kiep.go.kr, Tel: 044-414-1196)

차 례 ●●●

1.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의의
2.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최근 논의 동향
3. 전망과 시사점

주요 내용 ●●●

▶ 세계경제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12개국의 TPP, 중국과 한국, 일본, 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 및 한·중·일 3국 사이의 FTA가 진행 중임.
-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 심화는 미국과 중국, G2 국가의 아태지역 주도권을 얻기 위한 경쟁 격화에도 관련됨.

▶ 아태지역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은 다음과 같음.

	TPP	RCEP	한·중·일 FTA
참여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ASEAN(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한국, 중국, 일본
최근 동향	2015년 7월 협상 이후 큰 진전을 보여, 남은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 중임.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음.
향후 일정	다음 각료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2015년 11월 APEC 정상회담(필리핀)과 연계 하여 각료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2015년 10월 제10차 협상(부산)	2015년 9월 제8차 수석대표협상 (중국)
전망	남은 쟁점 지재권, 유제품,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대한 합의 도출 시 연내 타결이 예상됨. 10월 캐나다 총선 이후 협상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실질 내용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기술적인 부분은 2016년) 마무리할 계획으로 TPP가 타결되면 협상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가 심화될 수 있을지 기대됨.
협상전략	- 영향 분석을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 - TPP 후발 참여 예상국과 공동전선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됨.	- FTA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 개선 등에 노력	- 한국의 조정능력 발휘 필요 - 한·중 FTA, RCEP과 정합성 유지

▶ 아태지역 경제통합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무역에 파급효과가 크며,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책 수립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체계적·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1.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의의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¹⁾ 타결이 가시화됨에 따라 다른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됨.

- TPP는 30개 장(chapter) 중 27개 장에 대한 협상이 종료되었고 몇 가지 쟁점만 남은 상황으로, 타결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²⁾도 제10차 협상이 오는 10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으로, 지금까지의 협상은 더디게 진행되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논의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한·중·일 FTA는 현재 답보상태이나, 앞으로 한·중 FTA의 비준 및 RCEP의 실질적 진전 등에 따라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1.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경제 현황

	국토면적 (천 km)	인구		명목 GDP		대세계 교역		역내교역 비중
		수(백만 명)	대세계 비중	규모(십억 달러)	대세계 비중	규모(십억 달러)	대세계 비중	
TPP	31,163.2	799.0	11.4%	27,718.9	37.1%	9,489.4	25.8%	42.3%
RCEP	25,094.8	3,421.4	48.7%	21,646.9	29.0%	10,671.9	29.0%	42.4%
한·중·일 FTA	9850.2	1,538.3	21.9%	15,672.1	21.0%	6,779.6	18.4%	36.3%

자료: IMF, UNCTAD(2013년 기준).

■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 심화는 미국과 중국, G2 국가가 아태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패권 다툼과도 연계되어 있음.

- 미국은 아시아중심 전략(Pivot to Asia)에 따라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TPP 추진을 통하여 지역 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서비스, 투자, 지적권, 경쟁, 환경, 노동 등 21세기 글로벌 신무역 이슈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시장자유화 협상을 추구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경제협력을 위한 한·중·일 FTA 및 아시아 지역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RCEP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³⁾를 비롯하여 인프라 투자에 기초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 1)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P4(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에 의해 2006년 발효됐으나, 이후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확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
-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과 ASEAN과 FTA를 맺은 6개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총 16개국이 참여함.
- 3)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최종목표로, FTAAP는 TPP와 RCEP을 아우르는 거대경제통합체로 평가할 수 있음. 2006년 베트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때 지역경제통합 증진방안의 하나로 처음 제시되었으며, 한국은 2014년 11월 11일 APEC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FTAAP 실현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 이러한 아태지역에서의 경제통합 논의는 우리나라의 경제 및 무역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TPP와 RCEP 참여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은 각각 32.8%, 50.1%를 차지하는 등 아태지역은 우리나라 교역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경제통합 논의는 향후 우리나라 무역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표 2. 아태지역 경제통합 참여국과의 교역 현황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천 달러)	비중	수입액(천 달러)	비중	(천 달러)
TPP		187,693,626	32.8%	167,628,701	31.9%	20,064,925
	미국	70,284,872	12.3%	45,283,254	8.6%	25,001,618
	일본	32,183,788	5.6%	53,768,313	10.2%	-21,584,525
RCEP		286,844,123	50.1%	224,482,494	42.7%	62,361,628
	중국	145,287,701	25.4%	90,082,226	17.1%	55,205,475
	ASEAN	84,577,327	14.8%	53,417,787	10.2%	31,159,539
	인도	12,782,490	2.2%	5,274,668	1.0%	7,507,822
	호주	10,282,512	1.8%	20,413,019	3.9%	-10,130,507
세계		572,664,607	100%	525,514,506	100%	47,150,101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자료를 기초로 저자 정리(2014년 기준).

- 이와 함께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확산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新통상규범 도입과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변화 또한 무역의존도⁴⁾가 높은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표 3. 주요국의 무역의존도 비교

	한 국	미 국	일 본	중 국	독 일	영 국	호 주
수출의존도	42.91%	9.40%	14.58%	24.90%	39.96%	18.91%	16.21%
수입의존도	39.53%	13.88%	16.98%	22.09%	32.74%	25.59%	15.52%
무역의존도	82.44%	23.28%	31.56%	46.99%	72.70%	44.50%	31.73%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자료를 기초로 저자 정리(2013년 기준, 단 중국은 2012년 기준).

■ 이에 본고에서는 주요 아태지역 경제통합인 TPP, RCEP, 한·중·일 FTA의 최근 논의동향과 전망을 점검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4) 여기서의 무역의존도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함. 무역의존도(%) = (수출액+수입액)/GDP*100.

2.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최근 논의 동향

가. TPP

■ TPP는 아태지역 경제통합 중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연내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2015년 6월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의회로부터 무역촉진권한(TPA)⁵⁾을 받아 TPP 협상 추진에 힘이 실림.
- 일본 등 TPP 참여국은 TPA 없는 협상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였으나,⁶⁾ 지난 6월 TPA의 통과로 원활한 TPP 협상 진행을 기대해 왔음.
- 마지막 각료협상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7월 하와이 TPP 각료협상에서 일부 쟁점에서 각국의 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TPP 협상 타결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엿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내 TPP 타결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정임.
- 낙농품 시장개방에 어려움을 호소한 캐나다 현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기 위하여 TPP 타결이 2015년 10월 19일 캐나다의 총선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은 있음.
- 다만 미국 TPA법상 협상 타결에서 의회 이행법안 상정까지 최소 4개월⁷⁾이 소요된다는 점과 2016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과 맞물릴 경우 TPP 타결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늦어도 2015년 연내 타결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음.
- 칠레 외교부의 무역사무소(DIRECON) Andres Rebolledo 소장은 TPP 30개의 장(chapter) 중 27개 장에 대한 협상이 종료되었고 몇 가지 쟁점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타결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밝히고 있음.⁸⁾

표 4. TPP 최근 주요 협상 일지

시기	주요 협상 내용
2015년 4월 19~20일 마일 각료회의 (일본 도쿄)	- 마일 각료회의를 통해 미국과 일본 간 의견 차가 많이 좁혀졌으나, 쌀과 자동차에 대한 의견조율에는 실패함.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 38.5%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10% 전후로 인하하기로 합의 단, 세이프가드 도입에는 여전히 이견 ○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는 482엔/kg에서 50엔/kg으로 인하하고 세이프가드 기준에 대해서도 합의 ○ 일본의 쌀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대신 의무수입 물량(현 77만 톤/연간)에 추가하여 미국은 17만 5천 톤의 TRQ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5만 톤을 주장하고 있어 여전히 입장 차이 ○ 자동차 분야에서 일본은 美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의 즉시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장기간(20~30년) 관세유지 입장

5)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미국연방헌법」 제1조 제8절(3)은 외국과의 통상 규제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나, 미국의회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국제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만약 행정부가 TPA를 받은 경우,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결과에 대해 일정기한 내에 승인 또는 부결만 결정할 수 있으며 협정 내용에 대한 수정은 불가함.

6) 미국은 2007년 TPA가 만료된 이후 어떠한 FTA도 타결한 바 없음.

7) 서명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최종서명문안에 대해서 의회송부 30일 후 이행법안이 상정됨.

8) World trade online(August 20, 2015), "Chilean Trade Official Tells Civil Society 27 of 30 TPP Chapters Completed."

표 4. 계속

시기	주요 협상 내용
2015년 4월 23~26일 수석대표회의 (미국 워싱턴)	- TPP 수석대표회의에서 신약 자료독점권, 지적재산권, 국영기업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회의가 종료됨.
2015년 7월 28~31일 장관급 실무회의 (미국 하와이)	- 많은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몇 가지 쟁점으로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함. ○ 장관급 회담 전 20여 개 장만 종료되어 있었으나, 이번 회담을 통해 투자,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여러 개의 장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유제품 시장 접근, 지재권 등의 이슈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함.
향후 일정	-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주요 TPP 회원국 양자 간 또는 소규모 그룹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다음 각료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음. ○ APEC 정상회담이 2015년 11월 18~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릴 예정으로, 이와 연계하여 TPP 각료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는 관측이 있음. ⁹⁾

자료: 각종 기사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 비공개로 진행되는 TPP 협상은 핵심 협상국간 잔여 쟁점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졌으며, 3대 핵심쟁점(유제품, 지재권, 자동차)에서의 합의 도출이 협상타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 [유제품 시장접근] 미·일·캐·뉴 간의 의견대립이 있으며, 협상의 성패를 결정할 중요 쟁점임.
 - 캐나다¹⁰⁾는 유제품시장에 대해 모든 TPP 회원국에 TRQ 설정을 요청받았고, 일본¹¹⁾도 유제품 관세인하 및 규제완화를 요구받음.
 - 만약 캐나다와 일본이 뉴질랜드에 시장개방을 하지 않으면, 미국도 뉴질랜드 유제품에 대해 시장개방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¹²⁾ 뉴질랜드는 미국, 일본, 캐나다의 시장개방에 있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경우 미국의 큰 관심사인 지재권 합의를 방해할 수 있을 경고하였고, 심지어 TPP에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¹³⁾
 - 특히 캐나다의 경우 TPP 협상에 호의적인 현 하퍼 총리가 유제품 시장개방을 놓고 10월 총선에서 박빙의 리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유제품 개방에 있어서 추가적인 융통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지재권] 2015년 5월 협상안⁴⁾에 따르면, 생물의약품(biologic pharmaceutical product)에 대한 자료독점 기간이 확정되지 않고 [0]/[5]/[8]/[12]년 중에서 의견조율 중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기존에 미국은 생물의약품에 대해 12년간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¹⁵⁾을 주장하였으나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

9) World Trade Online(September 2, 2015), "Peru Says Next TPP Ministerial Not Set; Hints At Flexibility On Biologics."

10) 캐나다는 지난 수십 년간 NAFTA를 포함한 FTA에서 낙농 및 축산 분야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유제품의 경우 공급관리(Supply Management System)정책을 시행하여 수입 쿼터 및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왔음.

11) 일본은 유제품이 쌀, 보리, 쇠고기, 설탕과 함께 5대 민감품목으로, 완전한 관세철폐가 어렵다고 주장함.

12) 미국 유제품수출협회(USDEC)는 "일본과 캐나다에 대한 수출을 늘려 낙농대국인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 증가분을 메워나간다"면서 TPP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13) Financial Review(July 27, 2015), "Trans-Pacific Partnership trade deal threatened by dairy wrangle."

14) 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가 2015.8.4-5일 공개. <<http://keionline.org/tpp/11may2015-ip-text>>(검색일: 2015. 8. 25).

아 등은 복제약 생산에 미칠 영향, 의약품 가격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협상이 결렬됨.

- 생물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 기간은 각국의 현행법에 따라 주장하는 바에 차이가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등은 현행법인 5년에서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TPP 협상타결을 위해 미국이 유연성을 보일 것인지가 관건임.

표 5. 현행법에 따른 TPP참여국의 생물의약품에 대한 자료보호 기간

구분	12년	8년	5년	관련 법 없음.
TPP참여국	미국 (4년 자료독점+8년 시장독점)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라질,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베트남

자료: 기사 참고하여 저자 정리.

- [자동차 원산지규정] 역내가치함유비율(RVC)¹⁶⁾에 대해 일본과 NAFTA 국가간 이견이 있음.
- 7월 협상에서 55% 정도 수준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던¹⁷⁾ 미국이, 일본은 합의하여 완성차, 엔진 등에 대해서는 RVC 순원가법¹⁸⁾ 기준 45%(일부 30%)를 주장하였으며, 변속기, 앞 유리, 브레이크, 차 문, 배기장치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순원가법 계산 시 자동적인 역내산 인정을 주장함.¹⁹⁾
- NAFTA의 수준(엔진, 변속기, 자동차, 경트럭: 62.5%, 그 외 60%)에서 약간의 하향수준을 생각한 캐나다와 50% 이하로 협상하지 말 것을 위임받은 멕시코와의 합의에 실패함.²⁰⁾
- 그러나 향후 협상에서 이 부분은 40~55%선에서 합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7월 협상 중 일본²¹⁾은 40%로 상향조정을 거론하였다는 점,²²⁾ 미국·캐나다·멕시코의 업계의견은 50%인 점, 멕시코·일본 EPA에서는 65%(일부 50%)로 맺어져 있지만, 멕시코가 EU와 맺은 FTA에서는 RVC를 40%로 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40~55% 선에서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TPP 발효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이 제시한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²³⁾

- 일본안에 따르면, 협상타결 후 2년 이내 GDP기준 역내 경제활동의 85%를 대표하는 적어도 6개국이 협정을 비준한 경우 TPP협정이 발효되는바 필수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준에 도달한 국가사이에서만 협정이 발효되게 됨.

15) 최초 개발자가 시판허가 획득 시 제출한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대해 최초 개발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이 자료에 근거하여 동일 또는 유사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한·미 FTA에서는 신약 5년, 개량신약 3년 보장을 규정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법은 이에 더하여 신약 6년, 개량신약 4년의 자료독점권을 보장하고 있음).

16) 역내가치함유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 FTA의 해당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역내 가치 생산비중 (참고로 한국은 한·미 FTA에서 자동차 제품 원산지 기준을 RVC 중심으로 결정하며, 순원가법 35%, 직접법 35%/공제법 55% 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7) *The Globe and Mail*(August 5, 2015), "US excludes Canada, Mexico from TPP auto negotiations."

18) 순원가법 = (순원가 - 비원산지 재료) / 순원가 [단, 순원가 = 총비용 - (마케팅비용 + 로열티 + 운송비용 등)].

19) *World Trade Online*(August 26, 2015), "Mexican Auto Rep Blasts Details Of U.S.-Japan Deal On Rules of Origin."

20) *Bloomberg BNA*(August 21, 2015), "Little Room for Canada to Negotiate on Autos."

21) 일본의 자동차업체는 TPP 비참가국인 태국으로부터 많은 차 부품이 조달되며, 엄격한 원산지 조달 비율 규정은 현재의 supply chain에 대한 충격을 줄 것이라 예상함. Reuters(August 1, 2015) "Pacific Rim free trade talks fall short of deal."

22) *Bloomberg BNA*(August 12, 2015), "Australia Defends Biologics IP Law, Hopeful on TPP."

23) *World Trade Online*(August 14, 2015), "TPP Countries Move Toward Japanese Proposal On Entry Into Force."

표 6. TPP 참여국의 GDP 기준 역내 경제활동 비중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규모 (십억 달러)	16,768.1	4,898.5	1,826.8	1,505.9	1,260.9	313.2	297.9	277.0	202.4	181.6	170.6	16.1
비중(%)	60.49	17.67	6.59	5.43	4.54	1.12	1.07	0.99	0.73	0.65	0.61	0.05

자료: IMF(2013년 기준).

- TPP가 발효되면 최초 발효대상국(first tranche)은 TPP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를 구성하게 되는데, 본 위원회에서 미발효국의 협정발효일을 결정할지 여부와 미발효국에 대해 발효 전 제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는지 인증하는 절차(certification process)의 운영 여부를 논의 중임.
- 만약 위원회에서 인증 절차를 운영한다면 검사대상국이 되지 않기 위해 TPP 발효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TPP 영향평가 결과 및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TPP 가입여부를 결정지를 예정임.

- 2013년 11월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TPP에 대한 대내외 관심을 표명한 후, TPP 협상 참여국들과의 예비양자협의 추진을 통해 TPP 협상진전 동향 파악과 우리의 TPP 참여 관련 사항을 타진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TPP 참여에 따른 산업별·분야별 심층영향 분석 연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따른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표 7. TPP 협상 참여국과 한국과의 FTA

국가	칠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발효시기	한-칠레 '04.4.	한-싱가포르 '06.3.	한-ASEAN '07.6. 한-베트남 '15.5.(서명)	한-ASEAN '07.6.	한-ASEAN '08.7.	한-페루 '11.8	한-미 '12.3	한-호주 '14.12	한-캐나다 '15.1	한-뉴질랜드 '15.3.(서명)	- (협정)	- (협정)

자료: <http://fta.go.kr>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발효시기는 상품무역협정 기준).

표 8. TPP에 따른 기대영향

	TPP 참여	TPP 불참
긍정적 영향	- 원산지 누적기준에 따른 TPP 역내 생산 네트워크(supply chain) 활성화 - TPP 국가로의 수출확대 및 수입비용 절감 - FTA 미체결국 일본, 멕시코의 시장개방 - 신흥시장의 서비스시장 개방 및 비관세장벽 제거	- 국내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부담은 없음.
부정적 영향	-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의 부담 - 농수산물 수출국(미, 캐, 호, 뉴)으로부터의 수입증가 우려 - 과잉어획보조금²⁴⁾ 금지에 따른 부담 - 규범 정합성 관련 부담	- 원산지 누적기준에 따른 생산기지를 TPP 역내국으로 이전 시 한국으로의 투자 감소 및 중간재 수출에 있어서의 수출경쟁력 하락 우려

자료: 기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24) TPP 협정안 Chapter SS 제16.6조는 TPP 체약당사국 정부가 과잉어획 상태에 처한 어족자원을 어획하는 어로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불법어로 활동에 종사하는 어선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과잉어획 보조금은 과잉어획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남용가능성과 분쟁가능성이 제기되어오고 있음. 이재민, 장창익(2014), 「TPP 협상과 수산보조금 문제의 재등장-“포괄적 금지조항”을 통한 보조금협정 확대 적용」, 『통상법률』, 2월호 참고.

■ TPP 타결이 가시화되자 일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TPP 가입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TPP 후발 참여 예상 국가들과 전략적으로 공동전선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초기에 TPP 가입에 회의적이었으나,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6월 상원에서 TPP와 관련하여 TPA를 받음으로써 TPP의 실질적 타결이 전망되자, TPP 가입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었음을 밝힘.²⁵⁾
- 태국은 TPP 미참여 시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TPP 협상에 구체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만약 태국의 TPP 가입이 가시화되면 태국산 자동차부품으로 인해 역내원산지 비율을 30% 정도로 주장하고 있는 일본도 상향조정의 여지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 통상장관도 TPP에 가입 희망 의사를 밝혔음.²⁶⁾ 다만 필리핀이 TPP에 가입할 경우 국영기업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⁷⁾
- 대만 경제부도 TPP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 제2차 TPP회원국(a second-round entry member)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림.²⁸⁾

나. RCEP

■ 중국과 일본의 지역 내 패권다툼 등으로 인해 경제·사회적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간 협력체인 ASEAN+1 RCEP 진행의 중심이 되어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만장일치로 협상이 운영되면서,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RCEP은 2012년 11월 출범하여 2013년 5월 첫 번째 공식 회담(2013. 5. 17, 브루나이)을 시작으로, 9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하였고 2015년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협상을 앞두고 있음.
- 연내 실질적인 내용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제10차 협상에서 국가별 요청(request)과 제안(offer) 내용을 교환할 예정으로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 한국 대표단은 제9차 협상부터 제10차 협상까지 동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연맹(AFP)²⁹⁾ 국가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조정자(AFP Facilitator)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9. RCEP 최근 주요 논의 동향

시기	주요 논의 동향
2015년 2월 9~13일 제7차 협상 (태국 방콕)	- 상품 1차 양허안 및 상품·서비스·투자 협정문 등을 중점으로 논의 ○ 상품 분야에서는 1차 양허안 주요 요소(1차 양허안 수준 포함),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통관 및 무역 원활화, 무역구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음. ○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자유화 방식 및 서비스·투자 챕터 협정문 협상이 진행되었고,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법률제도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됨. ○ 특히 비관세조치, 무역구제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 전문가 세미나 등 여러 이슈별 논의가 있었음.

25) *The Straits Times*(August 9, 2015), "Jakarta open to TPP now after Obama's US Senate victory."

26) *The Diplomat*(June 25, 2015), "Confirmed: Philippines Wants to Join TPP."

27) *The National Interest*(August 19, 2015), "The Philippines, Thailand, South Korea and Taiwan: Joining TPP?"

28) *China Post*(June 24, 2015), "Taiwan could enter TPP following launch: MOEA."

29) 동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연맹(AFP: ASEAN FTA Partner):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

표 9. 계속

시기	주요 논의 동향
2015년 6월 8~13일 제8차 협상 (일본 교토)	- 제8차 협상은 관세 감축에 대한 합의에 별다른 진전 없이 종료됨. ○ 관세철폐 품목 비율인 ‘자율화율’ 목표에 대해 일본은 자율화율 80%를 원하는 반면, 신흥국은 40% 수준으로 낮추기를 희망하여 상당한 견해차를 보임. ○ 특히 각국의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추가 수입관세 감축이 시도되었으나, 협상에 진전이 없자 2015년 RCEP 타결에 대한 회의가 있었음.
2015년 7월 13일 임시 각료회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2015년 말 타결을 위해서는 협상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9차 협상을 앞두고 7월에 임시 각료회의가 열림. ○ 상품 분야의 경우 16개 참여국간 1차 양허안 교환을 위한 관세 철폐수준 등을 논의함. ○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자유화 방식 관련 논의를 진행함.
2015년 8월 3~7일 제9차 협상 (미얀마 네피도)	-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 서비스·투자 분야의 시장개방 △ 규범·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상품 분야에서 1차 양허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시장개방 관련 사항 및 금융서비스·통신서비스 등 2개 서비스 소작업반 설치에 대해 논의함. ○ 규범·협력 분야에서는 5개 작업반(경쟁·지재권·경제기술협력·법률제도·전자상거래) 및 상품 분야는 4개 소작업반(원산지·통관·SPS·STRACAP³⁰⁾) 설치에 대한 의견 조율 중
2015년 8월 24일 제3차 경제장관회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관세 감축수준을 확정지었으며, 실질사안에 대해서는 연내에 타결하고 기술적 사안에 대해서는 2016년에 다루기로 합의함.³¹⁾ ○ 발효 즉시 수입품에 부과되는 65% 관세를 철폐하고 10년 내 8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
향후 일정	- 2015년 10월 12~16일 제10차 협상(한국 부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국가별 요청(request)과 제안(offer) 내용을 교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자료: 각종 기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RCEP은 개도국에 대한 배려와 인도의 추가적인 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타결 시에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RCEP은 개도국(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에 대한 배려로 높은 수준의 개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인도는 전반적으로 자유화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가 맺어지기를 바라며, 제3차 장관회의에 제출한 안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80~85%, ASEAN 국가에 대해서는 70~75%, 중국, 호주,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40~50% 관세감축 입장을 표명함.³²⁾

■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RCEP 참여국 모두와 양자 FTA를 체결하였으며, RCEP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바, RCEP 체결에 따른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RCEP에서의 누적기준이 적용될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 등 역내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무역한 상품 등에 대해서 원산지 판정을 받기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며, RCEP 역내 국가간 통일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된다면 FTA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음.

30) STRACAP: Standard,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STRACAP(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일컫음.

31) *Today Online*(August 25, 2015), “Asia Pacific nations aim to eliminate 80% of import duties in 10 years.”

32) *Business Standard*(July 30, 2015), “Govt readies 3-tier offer for RCEP.”

- 특히 한·인도 FTA는 원산지 증명에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모두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³³⁾ FTA 활용률이 낮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한·ASEAN FTA도 활용률이 낮아 FTA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실정임.

표 10. FTA 협정별 FTA 수출 활용률

(단위: %)

FTA 협정(상대국)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2013	78.9	80.3	36.4	43.2	85.6	91.9	77.0	69.4
2014	80.5	79.6	37.0	56.3	85.3	90.5	76.2	72.7
2015 상반기	78.6	81.0	40.3	62.1	86.7	89.8	78.8	77.8

자료: 관세청.

다. 한·중·일 FTA

■ 한·중·일 FTA는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협상 진전을 위해 6차 협상부터 공식협상을 실무협상(국장급)과 수석대표협상(실장급)으로 나누어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현재 제8차 실무협상까지 진행된 상태임.

- 한·중·일 FTA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표방하고 있으나, 상품 양허,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방식 등의 핵심 이슈에 대한 3국간 상이한 이해관계로 협상이 더디게 진전되고 있음.

표 11. 한·중·일 FTA 최근 주요 논의 동향

시기	주요 논의 동향
2015년 1월 16~17일 제6차 수석대표협상 ³⁴⁾ (일본 도쿄)	- 상품·서비스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3국의 큰 의견 차이로, 별 진전 없이 마무리됨. ○ 민감한 부분인 상품양허 분야에서 여전히 의견이 다르고, 서비스분야도 개방 방식을 포지티브로 할지 네거티브로 할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2015년 4월 13~17일 제7차 실무협상 (한국 서울)	- 상품 양허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 핵심이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규범 및 협력 분야를 포함해 약 20여 개의 작업반 회의를 진행함.
2015년 5월 제7차 수석대표협상 (한국 서울)	- 제7차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품 양허협상지침(모델리티), 서비스 자유화 방식, 협정 대상 범위 등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함.
2015년 7월 20~24일 제8차 실무협상 (중국 베이징)	- 상품 양허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작업반 회의를 열어 규범 및 협력 분야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함.
2015년 9월 제8차 수석대표협상(중국)	- 제8차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제8차 수석대표 협상을 9월 중 중국에서 개최할 예정

자료: 각종 기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3) 한·인도 FTA는 양허품목의 74.6%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모두를 충족할 것을 요구함.

34) 제6차 실무협상은 2014년 11월 24~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음.

■ 한·중·일 FTA 협상은 비단 경제적 원인 외 영토문제나 역사문제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한국의 조정능력 발휘가 필요한 상황

- 한·중·일 FTA는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다툼, 산업구조조정의 부담, 과거의 역사적 경험 및 역사왜곡, 영토분쟁 등 다양한 정치·경제적 갈등 요인으로 협상 진척이 늦어지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 및 일본의 다른 FTA로의 역량집중³⁵⁾ 등으로 인해 사실상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음.
- 우리나라는 2015년 한·중·일 정상회담 의장국으로, 9~11월 중 개최예정인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일 FTA 논의가 심화될 수 있도록 중·일 간의 의견대립에 있어 조정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FTA는 다른 FTA와의 정합성을 추구하면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FTA 체결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협상전략을 구체화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 정식 서명된³⁶⁾ 한·중 FTA와 현재 협상 중인 RCEP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3. 전망과 시사점

■ TPP의 경우 연내 타결이 예상되나, 막판까지 각국 간의 의견대립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2016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RCEP과 한·중·일 FTA는 현재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TPP가 최종 타결되면 협상이 가속화될 수 있음.

- TPP는 남은 쟁점에서 합의가 도출되면 2015년 11월 APEC 정상회담 등과 연계하여 연내 타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TPP 타결을 위해서는 캐나다가 낙농·축산업 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캐나다는 오는 10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고 낙농·축산업 지역에서의 결과가 차기 집권당 결정에 중요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TPP 국가들이 각료회의를 10월 19일 총선 이후까지 연기할 가능성이 제기됨.³⁷⁾
- 지재권과 관련하여 미국이 자료독점권 12년안을 양보하여,³⁸⁾ 호주인인 5년 또는 타협안 7, 8년을 중심으로 논의 중³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재권 분야의 타협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자동차 역내가치함유비율에 대해서는 일본·NAFTA 국가들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TPP 협상이 타결될 경우 RCEP와 한·중·일 FTA 등 다른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35) 일본은 TPP의 핵심협상국으로 참여 중이며, EU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또한 연내에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교섭 중임.

36) 2015년 6월 1일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중 FTA가 정식 서명됨.

37) World Trade Online(September 2, 2015), "Peru Says Next TPP Ministerial Not Set; Hints At Flexibility On Biologics."

38) Bloomberg BNA(July 31, 2015), "U.S. Drops 12- year Data Lock-Up in TPP Talks."

39) Bloomberg BNA(August 12, 2015), "Australia Defends Biologics IP Law, Hopeful on TPP."

- TPP와 RCEP, 한·중·일 FTA는 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경제통합의 큰 흐름이며, 향후 경제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TPP에 대해서도 논의 동향을 주시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가입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RCEP과 TPP 규범내용이 상이한 측면이 있어, 이후 RCEP과 TPP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⁴⁰⁾의 최종목표인 FTAAP로 통합 시 정합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음.
 - 국영기업과 관련하여 RCEP 및 한·중·일 FTA 등 중국이 주도하는 Mega FTA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TPP 등 미국이 주도하는 Mega FTA에서는 민간·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저해하는 국영기업 지원 철폐가 논의되고 있음.
 -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도 미국 주도의 FTA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데 반해, 중국 주도의 FTA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배려로 이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과 관련하여 ASEAN 및 중국, 인도와의 FTA에서는 역외가공 방식 조항이 있어, 한·중·일 FTA, RCEP 등에서도 역외가공 방식을 반영할 소지가 높으나, 만약 TPP 참가 시 TPP에는 위원회 방식으로 개성공단 조항이 들어간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표 12. 기체결 FTA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방식

	역외가공 방식	위원회 방식
내용	FTA 체결국의 재료 또는 반제품을 역외가공지역에서 가공한 뒤 수출 시 소정요건에 부합하면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음.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세부사항 결정
FTA 체결국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페루, 콜롬비아, 베트남, 중국	EU,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참조하여 저자 재구성함.

- 앞으로도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체계적·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아직 TPP 가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협상 내용이 비공개되는 경향으로 인해 정보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으로 협상 내용 분석 및 동향 파악이 필요함.
 - TPP, RCEP, 한·중·일 FTA 등 메가 FTA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 역할을 하겠다는 통상 로드맵에 따라,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에 있어 규범 제정 등을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최근의 RTA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함.
 - 아태지역 경제통합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무역에 있어 파급효과가 크며,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책 수립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KIEP

4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 12개국간의 각료회의로 출범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홍콩, 필리핀, 페루,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등 아태지역 21개국이 가입하였음.